

	<h1>보도자료</h1>	2022. 1. 6 [목]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문의) 02-784-9862		

이재명 후보,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대원칙 반드시 지킬 것” 편법과 반칙 잡아내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는 의지 피력

- ‘소확행’ 이어 ‘명확행’ (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시리즈로 경기도에서 검증된 정책 성과, 전국 차원 확대하겠다는 포부 밝혀
- 도지사 시절 ‘불법 피해 신고센터’ 운영해 기획부동산 범죄 즉각 수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사전 예방까지… “모든 권한과 역량 동원해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 새로운 길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SNS에 경기도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근절’ 성과를 소개하며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이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며 경제 대통령·민생 대통령의 면모를 강조한 것.

기획부동산 근절은 이재명 후보의 ‘명확행’ (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일곱 번째 시리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사립학교 공정 채용’, ‘경기도 공공버스’,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 등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검증된 정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하거나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명확행’ (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시리즈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한 해 코로나19만큼 우리 국민을 힘들게 만든 것이 부동산 문제다.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다는 국민의 분노를 보면 무한 책임을 지닌 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가 2022년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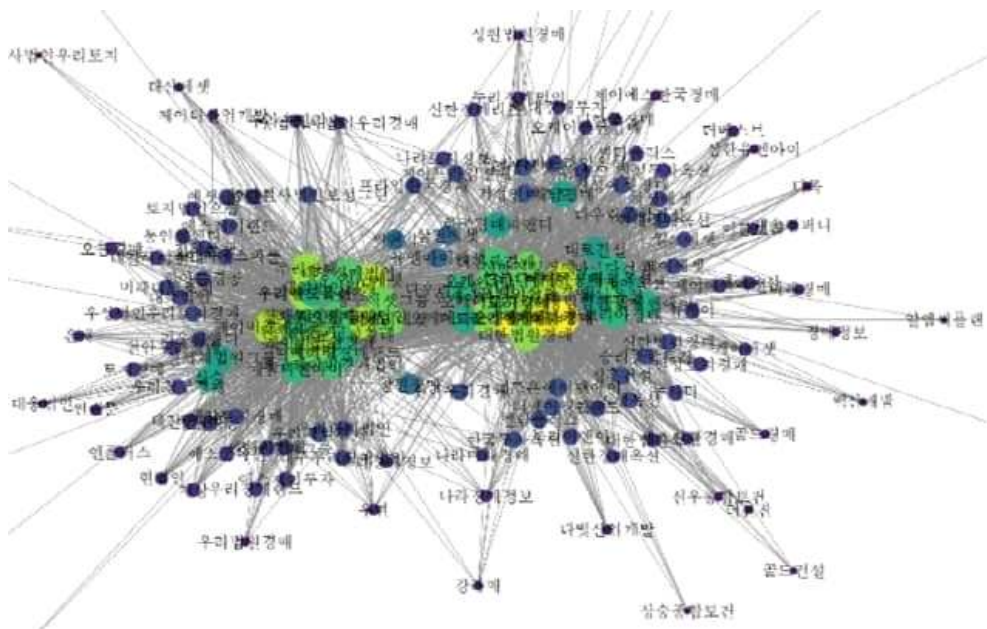
이 후보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 문제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근절에 집중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잘게 쪼개 개발 가능한 토지처럼 속여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서민의 박탈감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노리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도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불법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획부동산 범죄는 즉각 수사하고 검거하는 공조 체계를 수립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다. 그 결과 작년(2021) 1월부터 11월까지 총 147건을 수사 의뢰했고, 6월에는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이 검거되었으며, 불법 수익 242억원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신청이 이루어졌다.

경기도는 또한 29개 시·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사전 예방에도 힘썼다. 이에 2020년 7월 전·후 11개월간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대비 지분거래량이 약 31% 감소하는 등 기획부동산 사전 차단에 큰 역할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시절 실시했던 기획부동산 근절 성과를 토대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포착한 상위 50개 공유지분 판매 기획부동산 관계망/ 자료출처=경기도

<첨부 : SNS 메시지 전문>

SNS 메시지 전문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만큼 우리 국민을 힘들게 만든 것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다는 국민의 분노, 영끌로 내몰린 청년들과 영끌조차 하지 못해 좌절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무한 책임을 지닌 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입니다.

조세, 금융, 거래제도부터 공급 정책까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 문제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시장 질서를 교란 시켜 부당 이득을 노리는 부동산 반칙과 편법부터 제대로 잡아내는 것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근절에 집중했던 이유입니다.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잘게 쪼개 개발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서민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악용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부의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키는 중범죄입니다.

경찰청과 협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획부동산 범죄는 즉각 수사하고 검거하는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피해 신고 중 147건이 수사 의뢰됐고, 지난 6월에는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이 검거되었으며 불법 수익 242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확실한 처벌 못지않게 예방도 중요합니다. 경기도 29개 시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0년 7월 전·후 11개월간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대비 지분거래량이 약 31% 감소하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기획부동산 근절 성과를 토대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임야 지분거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 개혁 국회와 함께 정책적 대안도 모색해가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동원해 집 걱정 없는 나라,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의 새로운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7. 기획부동산 근절 #이재명은_했습니다